
출장보고서

2026. 03. 18 ~ 2026. 03. 21.

KDI 경제전망실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 목적) OECD WP1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 회의 참석
 - OECD WP1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 인공지능, 영업금지 약정(Non-Compete Clause), 공공부문 생산성,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토론

2 출장 개요

-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출장기간: 2026.03.18.~2026.03.21., 2박 4일
 - 예산과목: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 출장자 (총 1명)

소속	성명	직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수환	부연구위원

- 주요활동
 - 회의 참석 및 토론 참여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일정(안)
03.18 (수)	[출국] 인천(10:05) → 파리(16:25)
03.19 (목)	WP1 회의 (1일차)
03.20 (금)	WP1 회의 (2일차) [귀국] 파리(21:00)
03.21 (토)	인천공항 도착 (17:20)

4 활동 내용

회의 개요

- 회의명: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No. 1 on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Analysis)
- 일시 및 장소: 2026.3.19.(목)~20(금), 파리 OECD 본부
- 참석: OECD 회원국 대표, 가입 후보국 대표, 사무국 등
 - 한국 대표단: 김연준(주 OECD 대표부), 정수환(한국개발연구원)

1. Non-Compete and Related Agreement: Hoarding Talent, Holding Back Growth? (19일 오전 Part I)

1. 안건 주요내용

- 해당 보고서는 2026년 7월 OECD Employment Outlook을 통하여 공개 예정임.

- OECD 국가에서 경업금지 약정(Non-Compete Clauses)와 같이 노동 이동성을 저해하는 사후 고용 제한 조항(post-employment restraint clauses)이 확산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본래 경업금지 약정은 정당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지만,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음.
 - 경업금지 약정은 노동자가 더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여 거시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 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경업금지 약정 및 유사한 조항이 얼마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국가 간 제도적 구조를 비교함.
- 분석 결과, 15개 OECD 국가에서 경업금지 약정 및 유사한 제도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정도도 증가하고 있음.
 -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이지만, 경업금지 약정 역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각국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업금지 약정 및 유사 제도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제한은 직업 이동성을 저해하고, 임금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의 남용을 방지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II. 논의사항

- 멕시코, IMF,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수의 회원국은 법·제도적 구조와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 및 관련된 노동자의 정보와 인식 부족 등에 관하

여 언급함.

- 실제로는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법적으로는 무효일지라도 Chilling Effect를 통하여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 법적으로는 무효임에도 노동자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오해하여 이직과 창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영국 등 다수의 회원국은 현재의 보고서가 인과성이라기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까우며, 좀 더 향상된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함.
- 사무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소수의 준실험적 연구와 큰 틀에서 결론이 일치하다고 언급
- 각국의 관련 정책과 연구 및 현황에 관하여 공유하고, 각국 상황을 보고서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
- (대한민국) 현재 국내 대법원 판례는 보상금의 존재를 일관되게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바, 이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를 평가할 때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
- (추후 진행 계획) 추후 국가별 평가 점수를 개선하고, Country Notes에 대하여 각국에 사전에 코멘트를 요청할 계획

2. Update on Regulatory Work

(19일 오전 Part II)

1. 안건 주요내용

- 2025년 OECD Economic Outlook에서 공개된 “Time for a Regulatory Reset?” 보고서의 후속 작업에 관하여 논의함.

- 규제의 준수 비용을 측정하고 생산성에 미치는 합의 및 규제 개혁의 중점 과제를 논의함.

II. 논의사항

- 이탈리아와 코스타리카 등은 규제의 비용뿐 아니라 편익 및 분배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추후 진행 계획) 이스라엘은 4월 27일에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웨비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OECD 측은 해당 제안을 지지함.

3. A Boost from AI in Ageing Societies? Early Insights (19일 오전 Part III)

I. 안건 주요내용

- 생성형 AI 노출을 연령 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PIAAC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AI 노출도를 측정하고, 이를 자동화(Automation)와 증강(Augmentation)으로 나누어 이질적 영향을 분석함.
 - 기존 연구와 달리 직업 수준이 아니라 개인 수준 변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직업 내(within-occupation) 분석도 가능해짐.
- AI 노출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역U자형을 보였으나, 이는 관측 가능한 변수에 기인한 것이 많았음.

- 노출 정도를 자동화와 증강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자동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여 위협이 클 수 있었던 반면 경력이 쌓일수록 증강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 연령에 따라 노출 정도와 성격이 다른 것은 AI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II. 논의사항

- 다수의 회원국은 노동을 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위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고령화의 맥락에서 이것이 어려움을 언급함.
 - AI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노동 이동성을 제고하고 노동을 재배분(Labor Reallocation)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점에 다수의 회원국이 공감함.
-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여러 회원국은 입직 단계(Entry-Level Positions)의 고용이 더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함.
 - (아일랜드) 현재 아일랜드의 구직 공고 중 12%가 AI를 언급하고 있으며, AI에 많이 노출된 부문에서는 2023~2025년 사이에 15~29세 고용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함.
 - 단, 독일 등 해당 우려에 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였음.
- 재교육, 평생학습 및 노동시장 지원의 필요성에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 여러 회원국이 공감함.
- (대한민국)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AI 교육 정책에 관하여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청년층 고용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공유함.
- (추후 진행 계획) 의장은 사무국에 AI에 관한 정책 대응의 기존의 표준적인 대응과 동일할 것인지, 혹은 AI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

4. WP1 Workshop on Public Sector Efficiency

(19일 오후)

1. 안건 주요내용

- OECD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공공부문 생산성에 관한 워크숍을 기획함.
- OECD 평균 정부 지출은 GDP의 40% 이상, 고용의 20% 이상에 달하여 생산성 향상의 과급 효과가 큼.
- 각국의 공공부문 생산성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에 필수적인데, 현재는 국제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연구가 필요
- 사무국에서는 우선 보건(Health)과 교육 부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생산성을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성 측정 과정에서의 이슈를 정리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 관하여 발표함.
- (영국) 다양한 측정 지표의 함의에 관하여 소개하고,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 관하여 논의
- (호주) 보건 부문 생산성 측정과 관련 이슈, 국제적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논의
- (OECD) 생산성 국제 비교 과정의 데이터 요구 정도와 어려움 등에 관하여 논의함.

II. 논의사항

- 각국은 관련된 기술적 논의나 현존하는 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
- 여러 회원국은 공공부문의 특성 상 생산성 측정의 합의가 달라지는 상황과 그 합의 등에 관하여 질의함.
 - (네덜란드) 농촌 지역의 병원이나 버스 등 공공성을 띄지만 효율성이 높지 않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생산성 문제를 지적함.
 - (대한민국)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하여 유희 역량을 유지할 경우 생산성이 낮게 측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생산성 측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질의함.
 - 사무국에서는 해당 요인을 꾸준히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답변
- (추후 진행 계획) 노동시장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측정 방법론을 개선할 계획
 - 각국에서 관련된 계획이 진행될 경우 공유해줄 것을 요청

5.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Revisited: Facts, Drivers, and Policy Challenges

(20일 오전 Part I)

I. 안건 주요내용

- 경상수지 불균형의 추세와 구성 등 현황에 관하여 정리하고, 과거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축소되던 경상수지 불균형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이전의 정점에는 미치지 못함

- 정책 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증 문헌을 검토
- 추후의 분석 작업을 위한 과제 제시
 - 산업정책 등 비시장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주요국 경제의 정책 변화의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
 - 다국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분석

II. 논의사항

- 다수의 회원국은 해당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함.
-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IMF 등 유관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
- 호주와 이탈리아는 산업정책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폴란드는 해당 주제가 G20에서도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
- 다수의 회원국은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함.
- (추후 진행 계획) 각국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방법론을 개선하며,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지속 계획

6. An Integrated Modelling Approach to Assess the Impacts of Existing Structural Policies: The Case of Switzerland' s Climate and Energy Policies & The Climate and Adaptation Spatial General Equilibrium Model (OECD-CASGEM): The Macroeconomic Cost of Climate Change*

(20일 오전 Part II)

* 두 편의 논문이 통합되어 하나의 세션으로 진행됨

I. 안건 주요내용

- (논문 1) OECD의 Inclusive Forum on Carbon Migration Approaches (IFCMA)에서 개발된 분석 틀을 스위스의 정책에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함.
 -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3년에서 2035년 사이에 1-7% 가량 감축할 것으로 추산됨
 - 정책 간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시장과 비시장 수단을 조합할 필요성을 논의
- (논문 2) OECD의 공간 일반균형 모형(The Climate and Adaptation Spatial General Equilibrium Model, OECD-CASGEM)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비용 분석
 - 농업생산성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을 통하여 2050년까지 2.5%, 2100년까지 9%가량의 1인당 GDP 감소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추산됨.
 - 저위도 국가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나 일부 고위도 국가에서는 상대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역과 노동 이동 등을 통하여 충격을 완충할 필요성이 존재함.

II. 논의사항

- 독일, EU, TUAC 등은 기후변화의 비선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모형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함.
- 각국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에서 열대성 저기압, 수자원 부족 등 각국의 상황에 더 큰 함의를 가지는 유형의 충격을 분석에 포함시킬 것

을 제안함.

- (추후 진행 계획) 사무국은 추후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언급하고, IFCMA를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의 계획을 언급